여야 'MB 국정원 정치공작 수사' 충돌

與,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국감 통한 규명에도 총력
한국당 "정치 보복" 반발
"盧 뇌물 특검하자" 맞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연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파헤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구(舊) 여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특검카드로 맞불을 놓을 태세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한국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이 같은 공방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배제할 수 없으며, 표적이 됐던 당시 야권 정치인들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삼권분립을 짓밟은 MB정부 국정원의 헌정유린에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원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한 만큼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정감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파악에도 힘을 쏟을 기세다. 정치권에서 궁극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현 정권의 정치보복이 도를 넘어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명예훼손 피소…괴로운 정진석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자유한국당 정진석(뒷줄 왼쪽)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정재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의원은 이날 "과거 청산과 정치보복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게 이 정권"이라며 맹비난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장악한 집권 여당이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정치보복이라는 칼을 휘두를 것으로 본다"며 "촛불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나아가 노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권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 프레임'에 맞서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슈화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이전 진보정권 10년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는 의사도 드러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일가가 수백만 달러 뇌물을 받은 것은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고, 이를 규명하는 것이 적폐 청산"이라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책회의 직후에 열린 국정감사 대비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의 원조 적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대북 퍼주기' 및 '언론 탄압'과 묶어 '원조 적폐'라고 규정하며 당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은 이 같은 두 당의 충돌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지원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당 정치인을 타깃으로 삼아 심리전을 벌였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또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집권여당이 과거에 너무나 집착한다면서 국론분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대통령 '사람 중심 혁신경제' 띄우기

국무회의 주재…예산 집행 전략 마련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중소·벤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혁신성장 전략'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은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처에서 보다 이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 예산, 정책이 집행됐을 때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의 세 가지 축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등 각종 정책 발표와 이에 따른 언론 보도로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알려진 편이다.

반면,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4차 산업혁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혁신 성장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혁신기업 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혁신 성장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靑-4당 대표 오늘 만찬 회동

한국당 홍준표 불참…원내대표 제외 '안보회담' 형식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 나선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여야대표 회동은 만찬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참석 범위는 정무라인에서 각 당과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참석 범위는 원내대표까지 포함됐으나 국민의당에서 안보 문제에 한정해 각 당 대표 간 테이블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함에 따라 대표 회동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외교'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험난한 인사 정국을 마무리되고 여야 지도부와 마주한다는 점에서 협치의 계기가 마련될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대선 이후, 문 대통령과 안철수 대표가 제대로 마주하기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출국 직전 안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안 대표가 안보이슈 등 정국 현안을 놓고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협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다면 장기적 협치 방정식이 여전한 숙제로 남을 수있다.

일단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회동에서 안보 문제에 있어 야당과 초당적 협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대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번 만찬에서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남북 간의 핵 균형의 필요성' 등 실질적 북 핵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회의에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며 "이번 회동에서 이런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독대를 요구하며 이날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김성 복당 허용…강진원 재보류

〈장흥군수〉 〈강진군수〉

전남도당 내달 20일 재심의

한 차례 보류됐던 김성 장흥군수의 민주당 복당이 허용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6일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군수에 대해 복당을 허용하고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서는 다시 결정을 보류했다. 두 군수는 최근 복당을 신청했다가 한 차례 보류처분을 받았다.

도당은 최근 복당계를 제출한 286명 가운데 김 군수 등 254명에 대해 복당을 허용하고 강 군수 등 30명에게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전 지방의원 등 2명은 서류 미비, 대선 당시 해당 행위 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다.

도당 관계자는 "강 군수는 민주당 소속으로 군수선거에 출마한 뒤 탈당한 경험이 있어 심사 기준에 따른 엄격한 추가 소명을 들은 뒤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보류처분을 받은 탈당 당원들에 대해서는 다음달 20일 재심의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

정가라운지

주승용 "LH, 빚 133조 안갚고 배당 잔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시을)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는 133조원이나 되는데, 최근 3년간 빚은 제대로 안갚고 수백억원씩 배당금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배경에는 힘없는 LH를 압박해 배당을 늘린 기획재정부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LH의 경우 배당금 지급액이 2014년 681억원, 2015년 1516억원에서 2016년 4478억원으로 2년 사이 6.6배가 증가했는데, 이기간 당기순이익은 3배 늘어나는데 그쳤다"면서 "배당금액이 결정되는 배당성향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데, 2014년 9.58%에서 2015년에는 15.75%로 올렸고, 2016년에는 20%까지 배당성향을 올린 결과, LH의 배당금액이 2년 사이 6.6배나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수 시	정 시
인문	신 학 과	28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6	2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10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15	4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원서접수 : 2017. 9. 11(월) ~ 15(금) •전형일 : 2017. 9. 29(금)

정시모집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전형일 : 2018. 1. 9(화)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통합예술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추후 공지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